

조현오 막말 파문… 사퇴 압력 확산

<경찰청장 내정자>

'노 전대통령 차명계좌 자살' 발언이어

오열하는 천안함 유족들에 짐승 비유

野 "물러나라"…여권서도 책임론 제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발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조 내정자는 지난 3월 말 경찰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 '무엇 때문에 사망했느냐.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10만원짜리 수표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조 내정자는 "송구스럽다"며 "경찰이 위축되지 않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계까지 파문은 확산했다. 또 조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의 내용에 대해 전직 검찰 수뇌부 관계자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등 야권이 대국민 사죄와 사퇴를 요구

구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비극적으로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유타인 용서 못 할 폐륜적 망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조 내정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부대변인도 "조 내정자의 참을 수 없는 거액으로 토해내는 망발도 문제지만, 반성과 사과는 눈 뗄 수 없는 오만방자함은 더욱 문제"라며 "청와대는 즉각 조현오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한명숙 전총리를 비롯한 친노 인사들도 이날 오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내정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것이다.

안향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게 마련"이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마포구 노무현 재단 사무실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조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내정자가 노 전 대통령 관련 발언 외에도 천안함 유가족들을 '동물'에 비유한 발언과 함께 "승진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이나 실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조 내정자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이 나온 강연에서 오열하는 천안함 유족들에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3월 10일, 부산경찰청장 부임 인사자 출입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총경 인사는 적체돼 있다. 2001년 부산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이 올해 총경으로 승진하기는 어렵다"며 "승진을 하려면 이재오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